

보험의약품 급여 상환제도 개편에 대한 건의문

한국제약협회 회장 이경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회장 김진호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회장 황치엽

I. 제도개선 과도기에 나타나는 극심한 시장 혼란을 해소하여 주십시오

- 지난 2월부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재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약가제도협의체에서 동 제도를 폐지키로 합의한 내용이 언론에 발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의약품 거래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 특히 언제까지 제도가 지속되는지, 어느 시점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지, 이후 재시행과 제도개편에 따른 약가인하의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 많은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의약품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이에 약품비 상환제도를 개편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제도개선 일정과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어 빠른 시일 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II.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제도는 협의체 합의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 정부에서 설계중인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제도에는 약가제도협의체 합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약가제도협의체에서 위 제도를 폐지키로 합의한 것은 저가구매 차액 인정에 따른 병원의 과도한 우월적지위 남용(저가납품강요), 보험재정의 손실, 대형병원으로의 인센티브 쏠림현상 때문입니다. 이에 저가구매 차액을 기초로 장려금이 지급되는 구조의 제도 설계로 인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폐해가 재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년의 제도유예기간에 인센티브가 없었음에도 공급자간 시장경쟁으로 자율적인 저가구매가 충분히 달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제약회사와 의료기관과의 건강한 긴장관계 조성을 위한 장려금 지급이 자칫 보험재정의 낭비로 연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제도는 정부의 장기 정책 방향에 맞춰 환자 최적의 비용 효과적 약품이 선택될 수 있는 방향(약품목수, 투약일수, 고가약 대체)에서, 그리고 장려금 수혜가 1차, 2차, 3차 의료기관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설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III. 수시 작동하고 있는 현행 약가인하제도를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 신약의 보험등재가격이 선진국 그룹(OECD)의 평균 가격 대비 50%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며, 보험에 등재된 모든 의약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시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 ① 사용량 증가약제 약가인하 : 연간 600억원 절감
 - ② 사용범위 확대시 약가인하 : 최대 5%(14년 1월부터 시행)
 - ③ 특허만료에 의한 약가인하 : 연간 500~700억원 절감 추정
 - 특허만료 오리지널의약품 30% 인하 그리고 1년 후 23.5% 추가인하
 - 가산만료에 따른 제네릭의약품 21%~10% 인하
 - ④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인하 : 총 약품비 대비 1% 이상 예상(설계 중)
- 또한 2012년을 전후하여 단행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및 일괄 약가인하 정책으로 연간 2조 5천억원 상당의 약가인하 충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따라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29%에서 26%로 떨어짐
- 이와 함께 제네릭의 자발적인 저가 등재가 활성화되면서 공급자간 견전한 가격 경쟁도 상시 작동되고 있습니다.
 - 특허만료시 오리지널의약품 가격을 53.55%로 인하하고 제네릭 등재가격 역시 53.55%로 책정하는 오리지널-제네릭 동일가격제 영향으로 나타나는 현상
 - 저가등재는 원내외 모든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장려금으로 저가구매를 강제로 유도하면 차액을 늘리기 위해 제약사의 상한가 등재를 촉발시키게 되어 병원과 소수의 원내 환자만 혜택을 받게 됨

의약품 유통시장의 안정을 위해 약품비 보험급여 상환제도를 빠른 시일내에 개편하여 주실 것을 재차 건의드립니다. 끝.